

살면서 힘이 되는 법 이야기

요약본

Module 3. 여성이 반드시 알아야 할 친족상속법 상속제도 이해하기

- 1) 상속의 개념
- 2) 상속분
- 3) 상속의 승인과 포기
- 4) 상속회복청구권

1. 상속의 개념

1) 상속의 의의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에 그가 생전에 가지고 있던 재산상의 권리와 의무가 일정한 범위의 혈족과 배우자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피상속인이란 사망한 사람을 의미하고, 피상속인의 재산을 승계할 혈족과 배우자를 상속인이라 한다.

2) 상속의 개시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을 원인으로 개시된다(민법 제997조). 여기의 사망에는 실종선고와 인정사망이 포함된다. 상속은 피상속인의 주소지에서 개시되고 상속의 비용은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한다.

※ 실종선고 : 생사불명의 상태가 장기간 계속되고 있는 자를 일정한 요건과 절차에 의하여 사망한 것으로 하는 가정법원의 선고를 말한다.

※ 인정사망 :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으로 인하여 사망한 자가 있는 경우에 이를 조사한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의하여 죽은 것을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즉 재해, 재난에 있어 사체를 찾지 못하여 사망신고를 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비한 제도이다.

3) 상속순위

가. 제1순위 상속인 -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증손자녀...)

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면 차별 없이 모두 같은 순위로 상속인이 되며, 직계비속이 여러 명이면 피상속인과 촌수가 가장 가까운 사람이 상속인이 된다. 즉 자녀와 손자가 있으면 자녀가 상속인이 된다.

나) 친생자이건 양자이건, 혼인 중의 출생자이건 혼인 외의 출생자이건, 남자이건 여자이건, 또는 기혼이건 미혼이건 묻지 않는다.

다) 양자는 친생부모는 물론 양부모에 대해서도 모두 제1순위의 상속인이 된다. 다만, 친양자의 경우에는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친생부모의 상속인이 될 수 없다.

※ 친양자제도 : 양자와 친부모와의 관계를 완전히 끊고 양자를 양부모의 친자와 동일하게 취급하도록 하는 제도로, 친양자 입양이 되면 양자는 양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를 뿐만 아니라 가족관계등록부에도 양아버지의 친자식인 것처럼 기재된다.

나. 제2순위 상속인 -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가)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으로서, 제1순위의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 상속인이 된다. 부계인지 모계인지, 생가인지 양가인지 여부를 묻지 않는다. 예컨대 양자가 그 직계비속 없이 사망하면 친생부모와 양부모가 공동으로 상속인이 된다. 다만, 친양자 입양의 경우 친생부모는 친양자와의 친족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친양자의 상속인이 될 수 없다.

나) 부모가 이혼했는지 여부는 문제되지 않는다. 그리고 직계존속이 여러 명이면 피상속인과 촌수가 가장 가까운 사람이 상속인이 된다. 즉 부모와 조부모가 있는 경우 부모가 상속인이 된다.

다. 제3순위 상속인 - 형제자매

가)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로서, 제1순위의 상속인과 제2순위의 상속인 및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모두 없는 경우에 상속인이 된다.

나) 동성이복의 형제자매(어머니가 다른 경우)는 물론 이성동복의 형제자매(아버지가 다른 경우)도 이에 포함된다.

라. 제4순위 상속인 - 4촌 이내의 방계혈족(傍系血族)

이들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배우자, 형제자매가 모두 없는 경우에만 상속인이 되고,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며, 촌수가 같으면 공동상속인이 된다.

※ 방계혈족 : 같은 시조(始祖)에서 갈라져 나간 혈족을 의미하며 백부모, 숙부모, 생질, 형제자매 등이 이에 해당한다.

마. 배우자의 상속순위

가) 배우자는 제1순위인 직계비속 또는 제2순위의 직계존속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된다.

나)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모두 없으면 단독으로 상속인이 된다.

다) 피상속인이 사망할 당시의 배우자이어야 하므로 이혼한 배우자는 상속권이 없다.

2. 상속분

1) 상속분의 개념

유산 상속인이 여러 사람일 때, 각 상속인이 받을 수 있는 유산의 비율을 상속분이라 한다.

2) 법정상속분

법이 정한 상속인의 상속분을 의미한다.

가. 동순위 상속인 사이의 상속분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에 그 상속분은 동일하므로 균분하면 된다. 1990년 민법 개정으로 상속분이 평등하게 되었다. 따라서 장남인지 여부나 아들인지 딸인지 여부 및 출가여부를 떠나 상속분이 동일하다.

나. 배우자의 상속분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경우에 직계비속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하고,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경우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한다.

예컨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7억원이고 상속인으로 부인과 자녀 2명이 있는 경우 자녀들은 각각 2억원씩 상속하고 부인은 자녀의 상속분 2억원에 5할을 가산한 3억원을 상속하게 된다.

3) 기여분

가. 기여분의 개념

기여분이란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하거나 특별히 피상속인을 부양한 자가 있는 경우에 상속분 산정에 그러한 기여나 부양을 고려하는 제도를 말한다.

나. 기여분의 인정

가) 피상속인을 부양한 경우

상당한 기간 동거, 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경우에 기여분이 인정된다. 이른바 법률로 부양상속분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대법원 97 르 513 판례

성년인 자(子)가 부양의무의 존부나 그 순위에 구애됨이 없이 스스로 장기간 그 부모와 동거하면서 생계유지의 수준을 넘는 부양자 자신과 같은 생활수준을 유지하는 부양을 한 경우에는 부양의 시기, 방법 및 정도의 면에서 각기 특별한 부양이 된다고 보아 각 공동상속인 간의 공평을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그 부모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기여분을 인정함이 상당하다.

나) 피상속인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대한 특별한 기여를 한 경우

본래의 상속분에 따른 분할이 기여자에게 명백하게 불공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이어야 특별한 기여라 할 수 있다. 예컨대 수인의 자녀 중 한 사람이 무상으로 아버지의 사업을 위하여 장기간 노무를 제공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대법원 95 스 30 판례

사망한 남편은 공무원으로 종사하면서 적으나마 월급을 받아 왔고, 교통사고를 당하여 치료를 받으면서 치료부터 간병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부간의 부양의무 이행의 일환일 뿐, 남편의 상속재산 취득에 특별히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또한 처가 위 남편과는 별도로 쌀 소매업, 잡화상, 여관업 등의 사업을 하여 소득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 남편의 도움이 있었거나 남편과 공동으로 이를 경영한 것이고, 더욱이 처는 위 남편과의 혼인생활 중에 상속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들보다 더 많은 부동산들을 취득하여 처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부동산의 취득과 유지에 있어 위 남편의 처로서 통상 기대되는 정도를 넘어 특별히 기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

4) 유류분

가. 유류분의 개념

유류분이란 법률이 상속인에게 귀속을 보장되는 상속재산의 일정비율을 의미한다.

나. 인정범위

유류분은 민법상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배우자에게만 인정되며 방계혈족에게는 인정되지 않는다.

다. 유류분을 인정하는 이유는?

우리 민법은 법정상속분을 규정하고 있는 한편 사유재산 처분의 자유도 인정하고 있다. 그 결과 망인의 재산처분이 없었으면 법정상속분을 받을 수 있었던 상속인은 피상속인

이 그의 재산을 상속인 이외의 자 또는 상속인 중 일부에게 생전에 증여하거나 유증하는 경우 당장의 생계가 곤란해지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에 민법은 피상속인의 유산처분의 자유를 빼앗지 않으면서, 일정범위의 상속인에게는 최소한의 생활보장 내지 부양을 위하여 유류분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라. 유류분권자의 구체적인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이고,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이다.

마. 유류분청구권의 행사

가) 청구권자 및 상대방

청구권자는 유류분권리자와 그 승계인이다. 여기서 승계인이란 상속인, 포괄적 증여를 받은 자, 상속분의 양수인,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양수인 등을 말한다.

반환청구의 상대방은 유증을 받은 자, 증여를 받은 자 및 그의 포괄승계인이다. 그러나 특정물을 증여하고 그 증여를 받은 사람으로부터 그 물건을 양도받은 제3자, 즉 전득자(轉得者)는 상대방이 아니다.

나) 행사방법

유류분반환청구는 재판상 또는 재판 외에서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다)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민법 제1113조).

여기서 증여는 상속개시 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그 가액을 산정한다.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전에 한 것도 포함한다(민법 제1114조).

단, 판례는 공동상속인에 의하여 유류분이 침해당하고 있는 경우에는 증여시기를 불문하고 반환청구를 인정하고 있다.

대법원 95 다 17885 판례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생전 증여에 의하여 특별수익을 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1114조의 규정은 그 적용이 배제되고, 따라서 그 증여는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인지 여부, 당사자 쌍방이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서 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된다.

라) 반환방법

유류분의 반환방법에 관하여 민법은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으나, 증여 또는 유증 “대상재산 그 자체”를 반환하는 것, 즉 원물반환이 통상적인 반환방법이라고 할 것이다. 만약 원물반환이 불가능하다면 그 가액 상당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마) 산정의 기준시점

유류분액을 산정함에 있어 반환의무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그 반환의무자에 대하여 반환하여야 할 재산의 범위를 확정 한 다음 그 원물반환이 불가능하여 가액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바)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기간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그리고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민법 제1117조).

3. 상속의 승인과 포기

1) 상속의 승인과 포기의 개념

상속의 승인이란 상속이 개시된 후에 상속을 인정하는 상속인의 의사표시를 말한다. 상속의 승인에는 단순승인과 한정승인이 있다.

단순승인은 상속인이 아무런 이의 없이 피상속인의 채무에 대해서 무한책임을 지겠다는 의사표시를 말하고,

한정승인은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에 대하여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을 한도로 해서만 유한책임을 지겠다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후에 상속을 거절하는 상속인의 의사표시를 말한다.

2) 상속의 승인, 포기의 기간

상속인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이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대법원 2004 다 33865 판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상속개시의 원인이 되는 사실의 발생을 알고 이로써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을 말하는 바, 전순위 상속인인 피상속인의 처와 자녀들이 모두 적법하게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 누가 상속인이 되는지 여부는 상속의 순위와 상속포기의 효과에 관한 민법의 규정들에 따라서 정해질 터인데 일반인의 입장에서 피상속인의 처와 자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피상속인의 손자녀가 이로써 자신들이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까지 안다는 것은 이해에 속하므로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피상속인의 손자녀가 상속인이 된 경우에는 상속인이 상속개시의 원인사실을 아는 것만으로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알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본다.

즉, 위 판례 사안에서 손자녀는 피상속인의 처와 자녀가 상속을 포기하여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을 기산하게 된다.

3) 법정단순승인

민법은 다음 사유가 있는 경우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민법 제1026조)라고 규정하고 있다.

가.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나. 상속인이 제1019조 제1항의 기간(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이내에 한정 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

다.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

단,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함으로써 인하여 다음 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승인한 때에는 이 경우 은닉, 부정소비 등의 행위에도 불구하고 상속의 승인으로 보지 아니한다(민법 제1027조).

4) 상속의 승인, 포기의 방식

가. 한정승인의 방식

단순승인은 그 방식에 제한이 없으나,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한정승인기간 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가정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하여야 하며, 상속재산 중 이미 처분한 재산이 있는 때에는 그 목록과 가액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민법 제1030조).

나. 포기의 방식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포기의 기간 내에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민법 제1041조).

대법원 98 다 9021 판례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후 일정한 기간 내에만 가능하고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등 일정한 절차와 방식을 따라야만 그 효력이 있으므로, 상속개시 전에 한 상속포기약정은 그와 같은 절차와 방식에 따르지 아니한 것으로 효력이 없는 바, 상속인 중의 1인이 피상속인의 생존시에 피상속인에 대하여 상속을 포기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상속개시 후 민법이 정하는 절차와 방식에 따라 상속포기를 하지 아니한 이상, 상속개시 후에 자신의 상속권을 주장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거나 또는 신의칙에 반하는 권리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

5) 상속의 승인·포기의 효과

가. 단순승인의 효과

단순승인을 한 상속인은 제한 없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므로 상속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진다(민법 제1025조). 단순승인의 효과가 확정되면 그 후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의 신고가 수리되더라도 무효이다.

나. 한정승인의 효과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은 상속에 의하여 얻은 적극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하면 된다(민법 제1028조).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한 때에는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인의 재산상 권리의무는 소멸하지 아니한다(민법 제1031조).

다. 포기의 효과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면 처음부터, 즉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된다(민법 제1042조).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때에는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귀속된다(민법 제1043조).

4. 상속회복청구권

1) 상속회복청구권의 개념

상속권이 없으면서도 사실상 상속의 효과를 보유한 사람(참칭상속인)에 대하여 진정한 상속인이 상속의 효과를 회복할 것을 청구하는 권리이다(민법 999조).

2) 상속회복청구의 청구권자

가. '상속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원칙적인 청구권자이다.

나. 상속권을 침해당한 상속인이 상속회복청구를 하지 않은 채로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되지 않으나, 그 상속인의 상속인은 자기 고유의 상속권 침해를 원인으로 하여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다.

다. '상속분을 양도받은 자'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매수한 자와 같은 '상속재산의 특별승계인'은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없다.

라.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도 청구할 수 있다.

포괄유증이란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증여를 하면서 특정재산을 증여한 것이 아니라 "전 재산의 1/2을 증여한다"는 형식과 같이 전 재산의 일정비율을 포괄적으로 증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포괄유증을 받은 사람은 사실상 상속인이 된 것과 마찬가지로의 효과를 누리게 된다.

대법원 2000 다 22942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는 재산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으므로 포괄적 유증은 실질적으로는 수증분(증여받은 재산의 비율)을 상속분으로 하는 피상속인(유증자)에 의한 상속인 및 상속분의 지정과 같은 기능을 하고 있으므로 상속인의 상속회복청구권에 관한 규정은 포괄적 수증의 경우에 유추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마. '상속개시 후에 인지를 받은 자'도 청구할 수 있다.

※ 인지 : 혼인 외의 출생자에 대하여 생부 또는 생모가 자기의 자(子)라고 인정함으로써 법률상의 친자관계(親子關係)를 발생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즉 혼인 외의 관계에서 태어난 자는 이 인지가 있어야 비로소 부모와의 관계가 생긴다.

대법원 93 다 12 판례

상속개시 후의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가 상속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경우에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분할 기타 처분을 한 때에는 그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있는 바, 이 가액청구권은 상속회복청구권의 일종이다.

3) 상속회복청구의 상대방

상속회복청구의 상대방은 정당한 이유 없이 상속권을 침해하고 있는 자인 바, 이를 '참칭상속인'이라고 한다.

참칭상속인에는 정당한 상속권이 없음에도 상속인임을 신뢰하게 하는 외관을 가진 자와 상속인이라고 주장하면서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유하고 있는 자 및 이들의 상속인 등이 있다.

가장 많은 분쟁유형은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자신의 단독 명의로 등기함으로써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을 침해하는 경우이다.

대법원 96 다 4688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 공동상속인 중 1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등기가 상속을 원인으로 경료된 것이라면 등기명의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경료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등기명의인은 재산상속인임을 신뢰케 하는 외관을 갖추고 있는 자로서 참칭상속인에 해당된다.

상속회복청구권은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도 가능하다. 즉 다른 공동상속인의 지분을 침해한 상속인이 그 부동산을 다시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그 지분을 침해당한 공동상속인은 그 제3자에 대하여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로서 지분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4)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기간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하여야 한다(민법 제999조).

5)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방법

참칭상속인을 피고로 하여 상속회복청구를 구하는 민사소송을 관할법원에 제기하여야 한다.